

증인도 자료도 부실... '허탕' 서별관 청문회



책임자는 어디가고...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참석 증인들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이종걸 산업은행 회장(왼쪽부터), 정보 금융위 부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진용섭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핵심' 흥기택 불출석·감사보고 자료 등 미제출 野 "증인에 임의동행 명령 내려야" 강력 반발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산업의 부실화 문제를 진상 규명하기 위한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8일 국회에서 시작됐지만, 핵심 증인인 흥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불출석과 주요 자료 미제출로 '허탕청문회'로 전락할 조짐이다.

우선, 흥 전 회장은 아권이 요구했던 이른바 '최·중·택'(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비서관, 흥 전 회장) 3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었다. 그러나 이날 흥 전 회장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특히 야당 청문위원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번 청

문회는 사람으로 치자면 증빙에 걸려 곤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방도를 찾는 자리"라며 "그분들(최·중·택 3인방)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청문회는 사실상 청문회의 취지를 죽이는, 조선·해운업을 살릴 기회를 무산시키는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최경환 전 장관과 안종범 수석이 누락된 것도 유감이지만 그나마 의미 있는 증인이 흥 전 회장이었다"면서 "이분이 오늘 안 나왔는데 소재를 파악해 임의동행 명령을 내리든지 검찰 협조를 받든지 해서 흥 전 회장이 증인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흥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흥 전 회

장이 출석하도록) 계속 촉구해야 하고, 안 나올 때는 법적 조치를 위원회 차원에서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여야 합의로 '맹탕 청문회'가 된 것은 그렇다고 치겠지만, 자료를 주지 않아 '허탕 청문회'까지 되는 건 어떡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우리 경제의 향배를 가능하게 하는 청문회가 중요 핵심인사가 빠진 '깃털 청문회'로, 최소한의 자료도 빠진 '먹통 청문회'로 진행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대우조선해양 지원책이 결정됐던 서별관회의 회의록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 자료 등이다.

이에 청문회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서별관회의는 정책 결정이 아니라 협의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노력하겠

지만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고 작성했던 기관들이 모두 회수를 해갔다"고 말했다. 또 "(자료 제출 문제는) 통상 마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작성 기관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징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졌다.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에 대해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퓰리즘적인 정치, 사회문화가 정부 관리들의 유능함을 감춰 버리게 했다"고 밝힌 점이 질타 대상이 됐다.

박광온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최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사실 정책 결정은 잘못된 것이 없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당당하게 청문회에 나와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멋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박대통령 3당대표 회동 약속 지켜야"

사법개혁특별위·이견 조정 기구 설치 제안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이번 추석이 지나면 해외에서 대통령이 돌아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현안 해결을 위해 3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담이 꼭 이뤄지도록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 "지난 5월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회동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3개월마다 당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담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 같이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또 지난 5~7일 진행된 여야 3당 대표연설과 관련, "3당 대표연설의 내용이 빈말이 안 되고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우리 국회도 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대통령도 더 존경받는 길이 되리라 믿는다"며 "여야 모두 이번 연설에 담긴 내용 중 국회 차원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전날(7일) 자신의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간 쟁점·이견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를 제안하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체불임금 문제 해결, 쌀값 폭락 및 녹조로 인한 어민 피해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여야 3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오는 12~20일 미국 순방길에 오른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이 기간 자신을 대신할 비대위위원장 대행은 9일 오전 발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9일 발표되는 비대위위원장 대행이 향후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野, 광주 당원 세불리기 경쟁

더민주 '온가족 가입 운동'...국민의당 5500명 신규 확보

광주 민심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원 확보 등 '세 불리기'에 본격 화하고 있다.

더민주 광주시당은 8일 '추석맞이 온가족 당원가입하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주요 당직자와 당원에 게 추석 연휴 귀성길에 스마트폰으로 가족, 친지를 당원에 가입시켜달라는 지침을 내리고 SNS 캠페인에 들어갔다. 연휴가 끝난 뒤에는 8개 지역위원회별로 오프라인 당원 배가 운동을 펼칠 방침이다. 광주의 더민주 당원은 지난달

29일 현재 24만3200여명, 이 가운데 권리당원은 3만4400여명이다.

앞서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17~31일 당원 배가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였다. 국민의당은 이 기간 5500여명(권리당원 2500여명)의 신규 당원을 확보했다. 당원배가 운동 이전인 지난달 15일 현재 국민의당 광주 당원은 1만5000여명(권리당원 3700여명)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8개 의석을 석권했지만, 신생 정당인 탓에 더민주 당원 수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잠룡' 광역단체장들 국감이 검증무대

16개 상임위 증인 3천명 넘을 듯...우병우 출석 최대 관심
박원순 서울시장·남경필 경기지사·원희룡 제주지사 포함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보며 앞둔 8일 현재 13개 상임위원회에서 2919명의 기관증인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16개 상임위의 기관증인은 3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인 중에는 여야 대권잠룡으로 꼽히는 광역단체장들이 상당수 포함돼 국감장에서 쏟아질 각종 질문과 공세 속에서도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대권주자로서의 자질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에 따르면 기관증인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미래창조과학부(397명)다. 보건복지부(316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312명), 법제사법부(310명)도 300명을 넘는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 278명, 정부 256명, 산업통상자원부 250명, 환경노동부 221명, 국방부 171명, 기획재정부 168명, 외교통일부 152명, 운영위 72명, 여성가족부 16명의 기관증인이 채택됐다. 안전행정부와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정보

위 등은 기관증인을 채택하지 못했다.

기관증인은 각 상임위의 피감기관장과 간부들인 만큼 여야 간 쟁점이 되는 일반 증인 채택과 비교해 주목도가 떨어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현재 확정된 이번 국감의 기관증인 중에선 화제를 모을만한 인물이 적지 않다.

전날 운영위가 채택한 기관증인 가운데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야당의 사퇴요구를 받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포함됐다. 우 수석에 대한 검찰 내용을 유출한 의혹으로 역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전날 법사위가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궁극한 현안에 관련된 정·관계와 재계 인사들에 대한 일반증인 채택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이미 농해수위에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겸영성 LG CNS 대표 등이, 환노위에서 정성림 대우조선해양 대표와 한진건 포스코건설 대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와 라게시 카푸어 옥시본사 대표가 일반증인으로 확정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포함돼 주목을 끌고 있다. 차기 대통령선거가 1년 3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들 대권 잠룡들이 출석하는 국감장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여야 공방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욱 교수 '호남은 대선 들러리인가' 강연

자구구국포럼 광주모임 초청

'자구구국'(自救救國) 포럼 광주 준비모임은 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아주 낮은 상식'과 '아주 낮은 선택'의 저자인 김욱 서남대 교수를 초청해 '호남은 대선 들러리인가'라는 주제의 초청 강연을 가졌다.

'영남 패권주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해 온 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전략적 선택=호남 불가론'은 호남의 숙명인가, '호남 잠정권 포기'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등에 화두를 던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 교수는 강연에서 "나는 호남에 묻는다. 친노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영남 패권주의'에 투항한 지역주의 양비론'과 '전략적 선택을 위한 호남 불가론'이 민주주의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친노의 '호남불가론'으로 변형돼 이데올로기화 됐다"며 "이런 위선적 이데올로기에 끌려 다닌다면 패권주의의 문제로 스스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구구국 포럼'은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의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한 싱크탱크 겸 지지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